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발행인 | 강영훈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 www.jpi.or.kr

No. 2023-07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

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Ⅰ. 문제제기
Ⅱ. 중국의 해양팽창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Ⅲ.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과 전략전술 특징
Ⅳ. 인·태지역 국가들의 대응 양상
Ⅴ. 한국의 고려사항

Ⅰ. 문제제기

◆ 현재 국제정세는 국제적 수준에서 자유주의 국가와 반자유주의 세력 간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국제안보환경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이 패권장악 전략을 노골화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국가들의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권위주의 세력과의 결속을 심화하면서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임.

◆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화하고자 하는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권 장악을 위해 미국에 대한 A2/AD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남 지나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권 장악을 위해 미국에 대한 A2/AD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남 지나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수립된 자유주의 해양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임.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교역 수송로로서 경제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전력증강은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이 권위주의 반(反)서방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연대를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을 중심으로 중·러 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항전선이 형성되고 있음.

- 중·러는 2023년 '북부연합-2023'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출발, 알류샨 열도를 지나 알래스카까지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미야코 해협을 통해 귀환하는 작전로를 전개했는데, 이는 남해에서 남지나해로 이어지는 '제1 도련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임.
- 러시아는 민간 및 상업용을 표방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국에 임차했으나, 군·민 구분을 모호하게 이용하는 중국은 항구를 언제든지 군사적 용도변환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금까지 한반도 서해와 남해, 동지나해를 대상으로 했던 중·러 연합훈련이 동해로 확장되면서 한반도는 중·러에 의해 3면 바다가 모두 포위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시진핑이 대만을 강제로 흡

수하기 위해 무력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대만과 동지나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중앙정보국장(CIA)은 "시진핑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침략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음(Yen 2023).
-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도발(대만유사)은 미국유사, 일본유사로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유사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안보위협임.

시진핑이 대만을 강제로 흡수하기 위해 무력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대만과 동지나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본 보고서는 악화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중국의 해양팽창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1. 중국의 대전략과 해양전략

◆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정치경제 질서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중화질서로 재편한다는 대전략 목표를 추진 중에 있음.

- 시진핑 집권 후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임(Ward 2019).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주도의 중화질서는 현 중국체제의 이념적, 체제적 기반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전체주의 질서를 국제정치경제질서로 확장해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이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됨.

-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공고화 목표는 정치경제에서는 '일대일로전략,' 기술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 및 '중국표준 2035'(中共中央 国务院 2021), 군사적으로는 '제1도련선' 내에서의 대미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실현임(Saunders et.al. 2011, 201-204; You Ji 2001, 6-11; Ward 2019).
-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내에는 한국의 서해, 남해, 동해가 모두 포함되며, 동지나해의 일본령 도서와 대만, 남지나해의 대부분이 포함됨(그림 1 참조).

중국이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됨

〈그림 1〉 중국의 도련선 전략

출처: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2012, 재인용 Erickson and Wuthnow, 2016, p. 8.

중공·인민해방군 전력증강의 제1차 목표는 제1도련선 내 해양에 대한 지배력과 대만에 대한 무력흡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을 무력화시켜 중국의 지역 내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

◆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이하 중공·인민해방군)은 해권 장악이 패권의 전제조건이라는 알프레드 마한의 명제(Alfred T. Mahan)와 해군 제독 류화칭의 해군전략개념을 수용 2000년대 이후 제1도련선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음(Erickson and Wuthnow, 2016, 8; Saunders et.al. 2011, 201-204; You Ji 2001, 6-11).

- 중공·인민해방군 전력증강의 제1차 목표는 제1도련선 내 해양에 대한 지배력과 대만에 대한 무력흡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을 무력화시켜 중국의 지역 내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임(O'Rourke 2023).

◆ 중공·인민해방군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남지나해에서는 이른바 '9단선(현재 10단선)'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양영유권 분쟁 당사자 및 자유주의 해양질서를 수호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23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표준지도는 남지나해에 9개의 단선을 그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더 나아가 10개의 단선을 그어 대만 동해 지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음(中国新闻网 2023년 8월 28일자).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동아시아와 전세계 통상교역의 전략적 수송로라

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해역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외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전세계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임.

-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는 에너지자원 및 상품 교역의 전략적 수송로로서 한국, 일본, 중국 원유수입의 약 80% 이상, 전세계 물류의 ¼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수송로임.
- 한국은 원유수입의 90%, 수출입물동량의 40% 이상을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가 이익과 생존에 치명타를 입게 됨.

한국은 원유수입의 90%, 수출입물동량의 40% 이상을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가 이익과 생존에 치명타를 입게 됨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전략적 해상수송로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해저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국들인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

- 동중국해의 경우, 일본의 2002년 조사 추정치에 의하면 센카쿠 열도 해저 대륙붕에 석유 매장량 추정치 1,095억배럴, 일본이 향후 약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외에도 니켈, 망간과 같은 자원이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한국경제, 2005년 4월 24일자).
- 미국에너지정보국(EIA) 보고서는 남지나해에 채굴 가능한 석유매장량 약 11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약 190조 큐빅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주요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EIA, 2019).

III.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과 전략전술 특징

1.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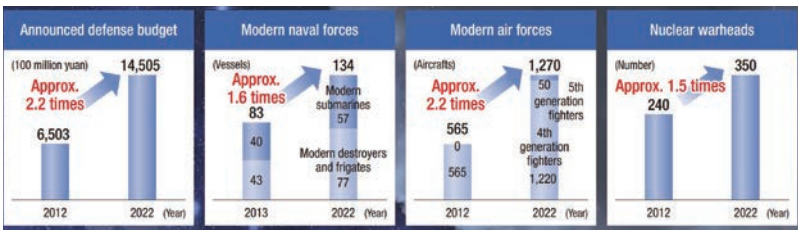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2위 군사비 지출(2022년 기준) 국가로서 지난 24년 연속 군사비 지출을 증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2012-2022) 공, 해, 전략로켓, 우주 등 최첨단 전력을 약 2배로 증강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Japan Ministry of Defense 2023, 2-3)(그림 2 참조).

- 2010년대 초 1,000억 달러 돌파 후 현재는 세계 2위 군사비 지출 국가로서 전세계 군사비의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약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고, 점차 미국과의 군사비(2022년 기준 약 8,769억 달러) 격차가 감소되는 추세임.

세계 2위 군사비 지출 국가로서 전세계 군사비의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약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고, 점차 미국과의 군사비(2022년 기준 약 8,769억 달러) 격차가 감소되는 추세

- 중국 국방비 실질 지출액을 추산한 미국 측 분석은 2022년 실질 국방비는 최소 7,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Eaglen 2023, 2).
- 중공·인민해방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당·군 체제로서 첫째,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국군)가 아닌 공산당의 무력이며, 둘째, 인민해방군은 자체적으로 기업, 금융, 유통 및 여타 사회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고, 셋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은 공표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 중국 군사력 증강 추세(2012-2022 10년간)



출처: http://www.mod.go.jp/en/publ/w_paper/wp2023/DOJ2023_Digest_E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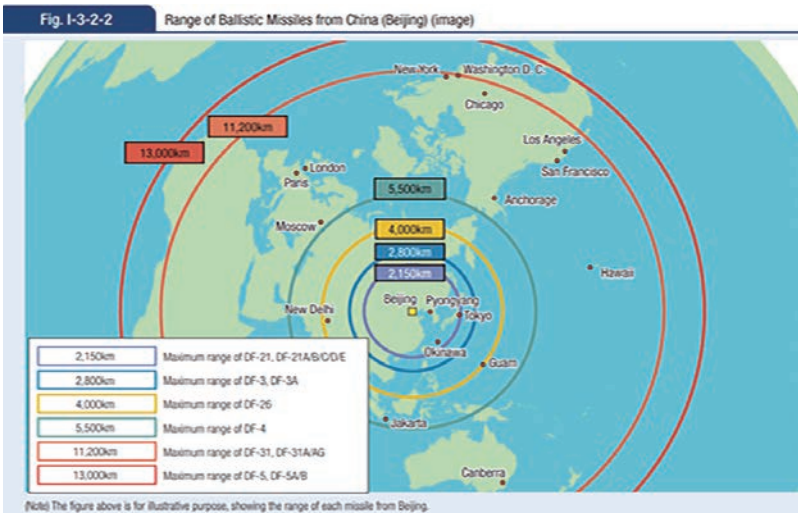
중국은 전략로켓 전력을 증강시킨 결과, 현재 제1도련선 내에 육상 및 해상 목표 타격능력을 배가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은 전략로켓 전력을 증강시킨 결과, 현재 제1도련선 내에 육상 및 해상 목표 타격능력을 배가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그림 3 참조).
- 인민해방군 미사일 전력은 2023년 현재 SRBMs 600기 이상, MRBMs: 500기 이상, ICBMs 300기 이상, IRBMS(DF-26) 250기 이상 외에 대함미사일인 DF-21D, SAMs, 방공미사일 HQ-9, HQ-9B, HQ-19(개발중)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DoD 2022).

◆ 현재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이내에서 '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위기 및 유사사태 발발시 미국 항모전단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서해와 남해는 중국의 'A2/AD' 영향권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음.

◆ 중공·인민해방군 해군은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한 결과, 전투함 수에 있어서 미국 해군을 제치고 전세계 1위 보유국이 되었으며, 현재 전력증강 속도를 감안할 경우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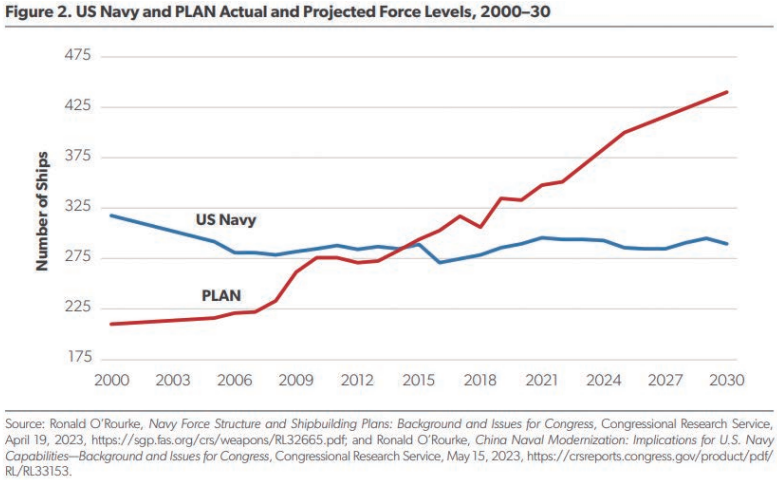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미사일 전력 현황



출처: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3, 62.

- 2015년 이후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 있어서 미국을 추월 2020년 기준 중국 360척 대 미국 296척이 되었고,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전함 수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25년 중국 400척 대 미국 286척, 2030년에는 중국 425척 대 미국 290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O'Rourke 2023, 10).

〈그림 4〉 중국과 미국 해군 군함 증강 비교



출처: Eaglen 2023, 5

◆ 또한 중공·인민해방군은 전통적 군사력 증강 외에 사이버공격(네트워크 파괴)과 민군융합을 통한 정치전, 지적재산권 탈취, 사이버전, 미디어인 지전 등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음.

2. 중공·인민해방군 해군력 및 전략전술 특징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과 군사력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중공·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은 전통전과 비전통전, 비대칭전, 유사혼복전,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초한전(超限戰)'으로 개념화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과 군사력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론과 군사력 개념은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혁명전략전술을 계승해 오고 있음.
- 중공 마오쩌둥 군사사상과 전쟁론은 전쟁과 비전쟁, 전시와 평시, 군사와 비군사, 군과 민간, 무기와 수단의 구분이 없으며, 현재는 중국의 모든 기관과 수단이 모두 군사/전쟁 수단임.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은 전통전과 비전통전, 비대칭전, 유사혼복전,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초한전(超限戰)'으로 개념화하고 있기도 함(이지용 2023).

◆ 해군력 또한 중공·인민해방군 개념을 반영, 인민해방군 해군 외에 해경, 해상민병, 상선단, 조선업 등 군, 민, 기업, 학 등을 모두 포괄해 구성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표방한 '해양강국'화 목표달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해양력' 강화 중심 기관에는 해군, 해경, 어업/어민, 상선, 조선업 등이 주요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당, 정, 군, 민, 학 구분 없이 모두 중공식 전략/전술 개념에 따라 전쟁/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소임.
- 즉, 모든 당/국가 및 민간/기업 등이 '중공식 전쟁 수단'인 중공체제에서 해양과 관련된 모든 당/국가 및 민간/기업 등이 해군력을 구성하는 것임.

◆ 중국의 해군력에는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외에 해경/해상민병(어민)과 조선업/상선대 등까지 포함됨. 이 중 해경과 해상민병은 2018년 이후 공식적으로 중공·인민해방군무경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해경은 제2해군력, 해상민병은 제3해군력으로 구분되고 있음(US DoD 2018, 72).
- 중국해경은 2018년 공식적으로 중국 국무부 소속에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인민해방군) 흡수되었음(人民网 2018년 6월 28일자).
- 국제법상 해군의 영역과 기능을 중공·인민해방군은 해경에게 담당하도

록 함으로써, 상대국 해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국의 군사안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임.
- 해상민병이란 중국의 일반 민간 어민들을 의미하며, 중국 일반 어민들은 준군사조직인 해상민병 소속임.
- 즉, 중국의 일반 민간 어민은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무력으로 비전통전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군사조직원이고, 이들은 중공 특색의 비전통전, 회색지대전을 수행하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이 비전통전쟁의 방식을 동원해 정치군사 및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중국특색의 전술 중 하나가 '회색지대전(戰)(Gray Zone Warfare)'인데, 중공·인민해방군은 한국의 서해부터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색지대전을 동원하고 있음.

중공·인민해방군은 한국의 서해부터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색지대전을 동원

- 회색지대전이란 전쟁과 평화, 군사와 민간,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공간을 살라미 전술을 이용해 조금씩 잠식해 나감으로써 상대방의 정면 대응을 어렵게 하고 군사안보 및 정치적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전술임(Erickson & Martinson eds. 2019, 15-19; Mazarr 2015, 2).
- 중공·인민해방군은 중공의 전통적 전략전술의 맥락에서 회색지대전을 구사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해양에 대한 힘의 투사를 확대 강화해오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이 해양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해상민병과 남지나해 인공섬 건설이 포함됨.

◆ 중공·인민해방군은 민간 어민을 해상민병으로 군사조직화하고 동원하면서 해상 분쟁,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축적, 해양 정보 수집 및 취득, 인공섬 건설 등에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있음.

중공·인민해방군은 민간 어민을 해상민병으로 군사조직화하고 동원하면서 해상 분쟁,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축적, 해양 정보 수집 및 취득, 인공섬 건설 등에 광범위하게 동원

- 중국의 어민은 국제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중국 국내법으로는 실질적인 인민해방군 제3의 해군력인 해상민병에 소속되어 있음(全国人民代表大会 1984[1998 수정]).
- 중국의 해상민병(어민)은 민간 어민신분으로 어로활동 등 비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관계로 피해 당사국의 해군이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경 또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은 상대국이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공·인민해방군의 작전과 침투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불법적 인공섬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중국의 회색지대전에는 해상민병인 어민뿐만 아니라 과학, 해양 탐사, 환경 등의 목적을 표방한 반민반관 탐사선, 중국의 상선대와 조선소 등이 모두 동원되어 이용되고 있음.

◆ 남지나해에 중국이 건설해오고 있는 인공섬은 살라미전술을 병합해 국제사회와 이해당사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해양영유권 주장 공고화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술 중 하나임(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중국은 현재까지 남지나해에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인공섬을 7개 건설했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의 해양개발을 내세우고, 민간어선과 민간 개발업자 등을 동원해 이해당사국 대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절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님을 천명했음.
- 하지만 인공섬 조성이 끝난 후에는 공군 활주로 건설, 방공시스템 배치, 이후 전략 폭격기 전개 등을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실행하며, 건설 및 군사력 배치를 완료하면 자국의 합법적 영토임을 강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 전략전술의 특징은 군과 민, 전시와 평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등의 구분 없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법상 대응하지 못하는 모호한 영역(회색지대)을 집중 공략해 자국의 전략적 군사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IV. 인·태지역 국가들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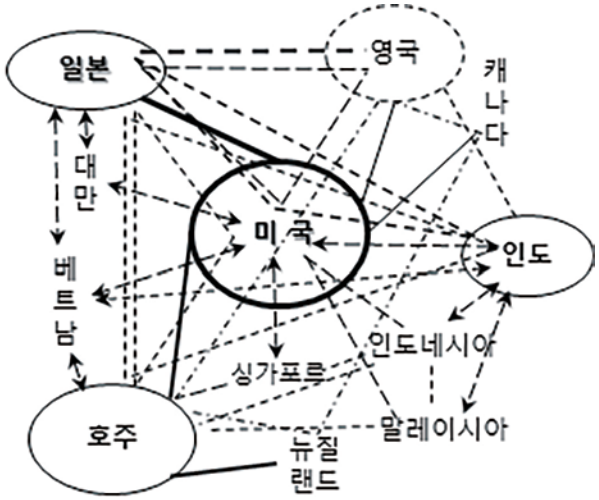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규칙기반 국제 자유해양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중 견제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

◆ 중국이 지배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샤프파워(sharp power) 행사를 노골화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규칙기반 국제 자유해양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중 견제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오고 있는 중임.
- 미국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도 명시를 하고 있음(The White House 2022a).
- 유럽 나토회원국들도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중화질서를 수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위협으로 규정(NATO 2022 Strategic Concept 2022).
- 인·태 지역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 이후 기존 안보협의체를 강화한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결성했음.

- 영미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는 2021년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 위협이 구체화됨에 따라 호주 해군력 증강(핵잠수함)에 협조하는 삼각동맹체인 'AUKUS' 창설했음.

〈그림 5〉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안보협력 추진 현황



※ 실선 원은 'Quad' 국가를 의미하며, 실선은 동맹관계, 점선은 안보협력 관계를 의미, 화살표는 안보협력을 위한 상호 접근 및 협정 체결에 근거함.

출처: 이지용 2020, 134.

◆ 해양팽창을 포함한 중국의 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인·태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이 미국의 동맹체제(Hub&Spokes)와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그림 5 참조).

- 인·태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안보협력과 협의를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의 팽창위협에 대한 대응은 군사안보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중 위협분산 움직임이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임.

중국의 팽창위협에 대한 대응은 군사안보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중 위협분산 움직임이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

◆ 현재 진행되기 시작한 '디커플링 차이나(decoupling China),' '디리스킹 차이나(derisking China)'는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는 유동적이지만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향후 불가역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될 것임.

- 국제정치경제 구조적 원인은 첫째,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둘째,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절감했으며, 셋째, 중공·인민해방군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넷째,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제공했던 이점이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현재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 차이나'에서 최첨단 산업 및 군사적 도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국경제의 급격한 추락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디리스킹 차이나'로 발전 진화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차이나 리스크 관리는 지속될 것임.

◆ 중국의 국제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제안, 2022년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참가해 창설했음.
- 이 외에도 중국의 경제 및 원자재 보복 위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안한 EPN에 이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복원력 정책(Supply Chain Resilience)'을 제안하고 있는 등, 중국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The White House 2022b; Weinstock 2022; CSIS 2022).

◆ 국제투자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국제정치경제 영향력 장악 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를 출범시켰음.

◆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인·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은 이와 같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인태지역 국가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인·태지역에서 군사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마찰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조되는 긴장과 압력이 충돌로 표출되는 주전장은 대만, 남지나해 등 동아시아 해양이 될 것임.
-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선제적 대응을 단행해야 할 시점임.

인·태지역에서 군사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마찰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조되는 긴장과 압력이 충돌로 표출되는 주전장은 대만, 남지나해 등 동아시아 해양이 될 것

V. 한국의 고려사항

1. 중국의 위협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

◆ 동아시아 해양안보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악화되는 인·태지역 안보환경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해야하는 사안임.

◆ 현재 인·태지역과 전세계 해양질서는 규칙 기반 자유주의 해양질서(rule-based maritime order)인 반면, 현재의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중화질서를 구축하고자하는 중공 주도 중화질서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 질서임.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수립 유지되고 있는 자유해양질서는 바다를 국제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양법 등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하고 있음.
- 반면, 해양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으며 공산당 전체주의와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중국은 바다를 국제 공공재가 아니라 육지처럼 선을 긋고 힘을 바탕으로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이익에 따라 중국이 규정한 틀 안에서 항해를 추구하는 것을 강요함.
-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떠나서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양질서가 무엇인가?' '현재 어느 국가들이 자유의 해양질서 유지를 원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질서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전체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이며, 시진핑 일인절대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전제정치화가 심화되고 있고,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지향하고 있음.
-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친중 종속화임.
- 자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와 한미동맹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국가생존과 번영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상반된 가치와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 함께 최대의 안보위협임을 재인식해야 하겠음.

◆ 동아시아 안보환경 악화의 주요인인 중국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으로

한국은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양질서가 무엇인가?' '현재 어느 국가들이 자유의 해양질서 유지를 원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한국은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질서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해야 할 필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친중 종속화

자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와 한미동맹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국가생존과 번영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상반된 가치와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 함께 최대의 안보위협임을 재인식해야

인해 안보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정치요인으로는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제 강화에 따라 중공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직성은 대폭 증가하고 예측성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날로 급진화되고 있음.
- 국내 경제요인으로는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경제모델'이 구조적으로 축적해 온 문제가 임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으로서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외요인으로는 중국의 대외팽창정책으로 자유진영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고, 탈중국(de-coupling China)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 디리스킹(de-risking China) 진행에 따라 정치경제적 대외고립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악화되는 중국의 대내외 정치경제 요인은 시진핑 일인독재체제의 경직성 및 중화민족주의와 맞물려 공격적 대외정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이 표출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발화점(flashing point)으로 대만과 남지나해가 지목되고 있는데, 두 발화점 모두 한국의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이 표출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발화점(flashing point)으로 대만과 남지나해가 지목되고 있는데, 두 발화점 모두 한국의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

◆ 중국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위기와 관련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쟁인데, 중국이 성장의 피크에 도달했느냐에 대한 상반된 논쟁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은 중공·인민해방군이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것임.

- '피크 차이나'론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한 쇠락하는 중국이 매우 위험하다는 논리(Brands and Beckley 2022)임.
- 이에 대한 반론은 중국은 아직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Mastro and Scissors 2022)임.
- '피크 차이나'에 대한 주요 찬반론은 공히,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으로 촉발될 안보위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해야하며, 동시에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과 같이 촘촘히 구축해야

2. 정책적 고려사항

◆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해야하며, 동시에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과 같이 촘촘히 구축해야 하겠음.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질서 위협세력이 결속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질서 및 평화 유

지의 제1방편은 동맹결집력 제고를 통한 세력균형과 억지력 확보임.
- 한국은 주도적으로 인·태 지역 국가 및 유럽 자유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다방면으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지역안보 위협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겠음.

◆ 한국의 안보를 보다 확고히 다지는 길은 한국이 인·태 지역 동맹 및 안보 협력의 하위 허브(sub-Hub)로서 핵심적 다원축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는 것임.

한국의 안보를 보다 확고히 다지는 길은 한국이 인·태 지역 동맹 및 안보협력의 하위 허브(sub-Hub)로서 핵심적 다원축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는 것

- 인·태지역 안보동학의 최근 경향은 미국의 동맹체제인 '허브앤스포크스(Hub&Spokes)'를 중심으로 주요 미국 동맹국(일본, 호주, 영국 등)이 하위 허브 역할을 하는 동맹의 다중심화임(이지용 2020, 140-142).
- 하위 허브국가는 미국의 동맹체제를 기본 축으로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지역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군사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을 촘촘히 짜듯이 자국 중심으로 엮고 있음.
- 하위 허브 다원축의 위상과 의미는 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동맹공약(commitment) 이행의지를 보다 확고히 결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억지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해양질서를 수호 및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인도·태평양 자유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기구 결성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존하는 국제해양기구 또는 다자협의체와 차별적인 '자유해양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판 나토(NATO)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Lee 2020).
-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로 이해당사국인 약소국과의 양자관계를 선호하며, 국가별 '분리통치(divide and rule)'를 통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와 다자주의를 무력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해권 장악을 위한 시도에서도 이러한 전술을 전형적으로 구사하고 있음.
- 서해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해양 수송로와 자유해양질서에 직접적 국가이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 직접적 해양영유권 분쟁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자유해양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해양안보 연대 기구 창설에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 및 해양안보 관련 대만유사사태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만유사는 한국유사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하겠음.

대만유사는 한국유사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 대만유사 발발은 바로 미국유사, 일본유사,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미중 군사충돌로 비화될 경우,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및 한국의 참전은 불가피하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도발 시 주한미군 및 한국에 대한 참전 무력화 비동전(non-kinetic warfare)을 전개할 것임.
- 대만유사 발발은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동지나해 수송로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문제를 유발할 것임.
- 대만유사는 사전에 발발가능성을 최대한 억지 및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책이며, 이를 위해 대중(對中) 국제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공·인민해방군의 상황오판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함.

한국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해 해양강국으로의 전략적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갖추어야 함

◆ 한국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해 해양강국으로의 전략적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은 대외교역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한국의 전체물동량 중 해상운송 점유율이 약 99% 이상인 점을 감안, 해양과 해양안보에 대한 국가 전략 및 전략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집중이 필요함.
- 전략적 해양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시작점으로 가칭 '국가해양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립 운영해야하겠음.

참고문헌

이지용. 2023.『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서울: 에포크미디어.

_____. 2020.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따른 인·태지역 해양안보동학 특징 분석. 『국가전략』. 제26권 4호, pp. 121~149.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https://amti.csis.org/

Brands, Hal. and Michael Beckley.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W.W.Norton & Company.

CSIS. 2022. "Takeaways from President Biden's Supply Chain Plan for 2022." February 28., https://www.csis.org/analysis/takeaways-president-bidens-supply-chain-plan-2022.

Eaglen, Mackenzie. 2023. "10 Ways the United States Is Falling Behind China in National Security." AEI (August), https://www.aei.org/wp-content/uploads/2023/09/10-Ways-the-US-Is-Falling-Behind-China-in-National-Security.pdf?x91208.

Erickson, Andrew S. and Joel Wuthnow Barriers. Springboards and Benchmarks: China Conceptualizes the Pacific "Island Chains". *The China Quarterly.* January 2016, pp 1 – 22.

Erickson, Andrew S. and Martinson, Ryan D. 2019.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3. *Defense of Japan 2023.* https://www.mod.go.jp/en/publ/w_paper/wp2023/DOJ2023_EN_Full.pdf.

Lee, Ji-Yong. 2020. China's Maritime Ambition, Security Dilemma and Lack of Multilateral Framework.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8, Issue 2, pp. 147–173.

Mastro, Oriana Skylar and Derek Scissors. 2022. "China Hasn't Reached the Peak of Its Power: Why Beijing Can Afford to Bide Its Time." August 22.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china-hasnt-reached-peak-its-power.

Mazarr, Michael J. 2015.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ing Era of Conflict.* Washington D.C.: U.S. Army War College Press.

O'Rourke, Ronald. 2023.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153(October 19),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4023707/china-naval-modernization-implications-for-us-navy-capabilities-background-and-issues-for-congress-oct-5-2023.pdf.

Phillip C. Saunders, Christopher Yung, Michael Swaine, and Andrew Nien-Dzu Yang eds., *The Chinese Navy: Expanding Capabilities, Evolving Rol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pp. 201-204.

The White House. 2022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https://

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_____. 2022b. "The Biden-Harri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Secure Critical Supply Chains in 2022." February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2/24/the-biden-harris-plan-to-revitalize-american-manufacturing-and-secure-critical-supply-chains-in-2022/.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media.defense.gov/2018/Aug/16/2001955282/-1/-1/1/2018-CHINA-MILITARY-POWER-REPORT.PDF.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9. *South China Sea Analysis Brief.* https://www.eia.gov/international/analysis/regions-of-interest/South_China_Sea

Ward, Jonathan. 2019. *China's Vision of Victory.* Fayetteville, NC: Atlas Publishing and Media Company.

Weinstock, Lida R. 2022. "Summary of Selected Biden Administration Actions on Supply Chains." CRS Insight, June 1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1927.

Yen, Hope. 2023. "CIA chief: China has some doubt on ability to invade Taiwan." *AP,* February 27,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taiwan-politics-united-states-government-eaf869eb617c6c356b2708607ed15759.

You Ji, "The Evolution of China's Maritime Combat Doctrines and Models: 1949-2001,"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May 2001), pp. 6-11.

人民网. 2018. "国防部:海警队伍转隶武警部队没有改变其基本任务属性." 6월 28일자, http://military.people.com.cn/n1/2018/0628/c1011-30094252.html.

全国人民代表大会. 1984[1998 수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已被修订] 第三十六条, http://www.lawinfochina.com/display.aspx?lib=law&id=48&CGid=.

中共中央 国务院. 2021.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标准化发展纲要》." https://www.gov.cn/zhengce/2021-10/10/content_5641727.htm.

中国新闻网. 2023. "2023年版标准地图"正式上线. 8월 28일. https://www.chinanews.com.cn/gn/2023/08-28/10068281.shtml.

❖ 저자 약력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 Polic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전공분야는 중국정치경제, 중국외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저서로는 중국의 초한전 (2023),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공저) (2021) 등이 있음.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계명대 외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과 중국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 중임.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